

기고

통합돌봄시대 '간병 살인'의 사회적 과제

이정서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은 빈곤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큰 축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에서부터 바우처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많은 과제를 남겨주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들려오는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소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돌봄을 필요로 한다면 그동안 화목하고 평온했던 가족의 일상은 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지난달 3월 10일 전북 임실에서는 20년 넘게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효자로 소문났던 60대 아들과 일가족의 극단적 비극의 소식이 전해졌다. 자택 거실에서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A씨, 그리고 40대 손자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의심되는 죽

음이라고 볼 수 있다. 간병 살인은 오랫동안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나 보호자가 간병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숨진 A씨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중풍에 걸린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시골에 귀촌했고, 2016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돌봄에 전념한 상태였다.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하거나, 가족이 직장과 사회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독박 돌봄에 매달리는 경우가 보통이다.

향후 반복되지 않게 비극을 막으려면 개개인의 사정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설계'가 필수적이다. 개별화의 돌봄서비스는 일상 수발, 영양 관리, 질병 관리, 주택 개조, 병원 동행 등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정에 맞는 맞춤형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복지·건강관리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케어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과 인력·인프라 부족 및 지역 간 돌봄 격차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돌봄 체계의 성공 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통합돌봄 재원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통합한 돌봄기금 신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가 228개 기초단체에 주는 예산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총 620억원에 불과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기반시설에 따라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는 통합돌봄 대상을 모든 주민이 아니라 노인과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했고, 더 넓히려면 정부와 '협'을 거쳐야 한다. 맞춤형 돌봄을 설계하는 지자체가 직접 주민의 돌봄 필요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 조사는 한정적 수준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지난달 27일 전국 시행으로, 도입(2026~2027년)→안정(2028~2029년)→고도화(2030년~) 3단계를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으로 설계됐다. 1단계 도입기에 입원·임소 경계선상 노인 128만명, 65살 이상 고령 장애인 146만명, 65살 미만 중증 장애인 15만명이 대상이다. 읍면동·시군구나 건강보험공단 어디든 한국에만 신청하면, 종합판정소사를 거쳐 보건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치매 부모를 돌보는 일, 중증 장애 자녀의 평생 돌봄, 가족돌봄의 고투와 희생, 홀로 사는 중장년의 외로운 죽음 등은 늘 우리를 가까이 머물러 있다. 통합돌봄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문제로 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지금 이 순간 돌봄의 벼랑 끝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정부는 말로만 통합돌봄을 외치며 복지부동과 행정 편의로 그 길을 가로막아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기고

창업기업 만드는 도시에서 창업가 키우는 도시로

최진영

㈜영스 대표



"창업 생태계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창업가가 끝까지 살아남았는가에 달려 있다."

최근 대한민국 국가 창업 프로젝트인 모두의창업 멘토 단으로 참여하며 다시 한번 지역 창업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역 창업을 이야기할 때 기업 수, 지원사업 선정 건수, 투자 유치 규모와 같은 정량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왔다. 물론 이러한 성과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창업을 이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역 창업 생태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창업기업'이 아니라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창업가'다.

창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지만, 결국 시장과 고객, 조직과 자금,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불확실성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기업이 만들어진다. 특히 지역 창업은 수도권보다 자본과 인재, 네트워크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 역량만으로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창업기업 육성보다 '창업가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지역에서 오래 살아남은 기업들을 보면 공통점

이 있다. 대표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버티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는 점이다. 지역 선배 창업가의 조언, 대학과 기관의 연계,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지역 커뮤니티와 시민들의 관심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모두의창업은 지역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창업 육성 프로젝트라는 상징성만큼이나,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창업 지원 구조를 넘어 지역 현장의 문제와 가능성을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역에는 수도권과 다른 문제들이 존재한다.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돌봄 공백, 의료 및 교육 접근성, 지역 산업 쇠퇴 등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지역의 청년과 창업가들이다.

결국 지역 기반 창업은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지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교육, 돌봄, 헬스케어, 문화, 관광, 로컬 콘텐츠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도들이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 지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짧은 교육과 단기 성과 중심의 육성 모델만으로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몇 개월 동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5년 이상 실제 시장 안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동행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창업은 '밀도 있는 성장'이 중요하다. 많은 창업팀을 빠르게 배출하는 방식보다, 가능성 있는 한 명의 창업가를 제대로 성장시키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창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멘토,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 지역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결국 기업의 생존율을 결정한다.

지역은 결코 기회가 부족한 공간이 아니다.

오려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새로운 시장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지역이다. 이제 지역 창업 정책도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창업기업의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다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창업가는 결국 도시의 미래로 남는다.

이제 지역은 단순히 창업기업을 많이 만드는 도시를 넘어, 사람을 성장시키고 창업가를 끝까지 키워내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취재수첩

슬로건과 일상의 간극

김은지
산업부 기자



광주는 오래전부터 'AI 중심도시'를 미래 비전으로 내세우며 도시 곳곳의 행정 슬로건에 늘 'AI'라는 이름을 약속처럼 붙였다.

외형만 보면 광주는 이미 미래 산업의 중심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일상의 현실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AI 시대 소비생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의 AI 인지도는 전국 5대 광역권 중 가장 낮았고, 실제 삶 속에서 AI를 중요하게 활용한다는 응답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심지어 이미 보편화된 앱 기반 디지털 결제나 전자상거래 이용률마저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한민국 AI 대표도시를 자처하는 곳에서, 정작

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통계는 곧 시민들이 "AI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동안 우리의 AI 정책은 주로 산업과 기업, 즉 공급자 중심으로 흘러왔다. 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집중됐지만, 정작 그 기술을 누리야 할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거창한 선언과 성과가 뒤따르다 한들, 그것이 시민의 생활 변화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제값은 못 받는다. 기술 격차가 결국 지역 내 만족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향해온 'AI 도시'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도시의 진짜 경쟁력은 화려한 구조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얼마나 편리해졌는가에 증명된다. 거창한 미래 비전보다 동네 골목길에서 먼저 체감되는 기술, 광주의 AI 정책이 마주한 과제는 그리 멀지 않은 일상 속에 있다.

독자투고

교통 사망사고 예방, 모두의 관심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암경찰서 지역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와 배려로운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영암군은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된 교통 환경과 삼호읍의 대불산단, 그 외는 농음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대형 화물차량과 농기계 운행 비율이 높고, 고령 인구가 많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영암경찰서는 교통사고 다발 구간 중심 예방 순찰과 음주운전 단속,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유관 기관 합동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안전 시설 개선과 위험요인 사전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교통안전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영암을 만들 수 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을 함께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유충현 영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겸경

사설

광주·전남 공장 경매 '붐물'...대책 절실

광주·전남지역 공장들이 경매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을 보면 올 1분기 광주지역 공장경매 진행건수는 16건이다. 이는 2023년 1분기 3건보다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남도 올 1분기 97건으로 2023년(39건)보다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00건까지 치솟았다.

이런 공장 경매 증가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 변화가 아니라 제조업 현장의 자금난과 수요 감소가 반영된 것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고풍물·고금리 부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둔화까지 겹친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인지 지역산단 곳곳에서는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폐업하는 업체까지 속출하고 있다.

구지근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첨단국가산단 폐업 기업은 2024년 25곳에서 지난해 44곳으로 증가했다. 휴업 기업도 같은 기간 7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전남 대불국가산단 역시 지난해 폐업 기업이 9곳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광양 국가산단도 같은 기간 폐업 3곳, 휴업 1곳이 신고됐다.

문제는 이들 공장 매물이 경매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매각가를 감정가로 나는 비율인 경매 매각가율은 전남 공장의 경우 2023년 1분기 84.3%에서 올 1분기 58.6%로 추락했다. 올 2분기에는 50.6%까지 떨어졌다.

평균 응찰자 수도 대부분 1명대로 구매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광주 공장도 올 2분기 매각가율이 감정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7.1%에 그쳤다.

여기에 폐업 등에 나선 기업들이 대부분 금융·사출·가공 등 이른바 제조업 '밀단'을 떠받치고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라는 점도 심각하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 구조로 연결된 지역 제조업 특성상 이들 기업들의 붕괴는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뿌리산업과 협력업체를 살리기 위한 금융·관료·수출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공급사용표'에 드러난 호남권 현주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정부가 전국을 '5극 3특'으로 나눠 '지역공급사용표'를 최초로 발표했는데 수도권과 생산·재화·서비스 집중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고 광주·전남은 모든 면에서 열악했다.

5극 3특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대전·충청남북도),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과 강원, 제주,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일컫는다.

지역공급사용표(RSUT, Regional Supply and Use Tables)는 일정 기간 각 지역 경제에 공급되고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를 산업별·생산물별로 정리한 통계자료로 정부는 이번엔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예전에는 지역별 생산 규모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주된 생산물과 생산·소비 및 이동 경로까지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전체 생산 산출액이 총 564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8.5%가 수도권 생산 산출액이었다.

이어 동남권(16.4%), 중부권(14.0%), 대경권(8.5%) 순이었으며, 호남권은 7.0%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는 경기 24.6%, 서울 18.9%, 충남 7.3%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광주와 전남은 각각 2.1%, 4.9%였다.

또 수출·입 역시 수도권이 전체 수출액의 43.7%, 수입액의 43.4%를 차지했다. 호남권은 각각 9.0%, 9.8% 수준에 그쳤다.

지역 간 거래를 뜻하는 수출·입 규모에서도 수도권 비중이 40%를 넘어섰고 소비(47.8%)·투자(51.8%)·중간수요(45.3%)를 합한 '지역 내 사용'도 수도권에 46.9%가 집중됐다.

지역별 교역에서 흑자를 낸 곳은 서울(144조2000억원)을 비롯해 4곳이었으며 광주(12조3000억원), 전남(2조9000억원) 등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역공급사용표를 향후 지자체와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국가 승인통계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 표가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



www.GwangNam.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nam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a list of staff members.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